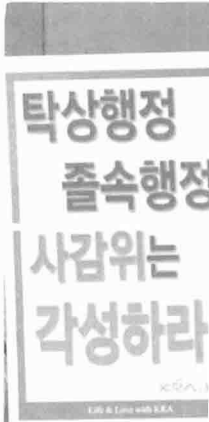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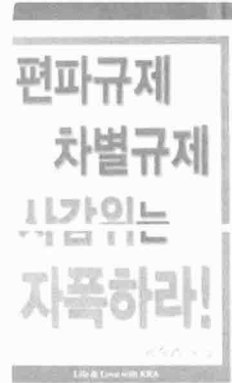


외 부 기 고

마 사 회

사 감 위 의 진 행 경 과 및

문 제 점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폭탄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김 정 구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의 발표를 앞두고 관련단체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화)에는 종합계획안 워크숍이 관련단체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또한 19일(화) 사감위 주최 공청회에서는 규제(안)의 총체적인 오류가 드러났고 사감위원장도 이를 시인하였다. 아울러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경마공원에서는 6만명이 넘는 경마팬들이 규제 반대서명에 참여하고, 이에 발끈한 사감위원 한 명은 마사회 홈페이지에 시행체를 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사이버공간이 한 동안 시끄러웠다.



도박중독자가 가장 많다는 정선 카지노 근처에서 사목활동을 했다는 이 사감위원은 그 동안 경마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을 열거하며 매우 격앙된 논조로 사감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공공기관의 일원이 피감기관의 홈페이지에 비난 글을 올려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사감위가 문제 삼는 병적 도박은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이다.

개인의 자기통제 실패가 문제가 되는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는 좀 더 냉정했어야 했다.

또한 글의 내용에서도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지만 그 중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사감위에서 규제논리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차효과'는 이 글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는 합법 사행산업이 발달하면 불법도박이 마치 객차처럼 끌려온다는 이론인데, 우리 학계에서는 누구도 '기관차효과'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며 학문적으로 검증된 이론이 아니라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럴듯한 신조어에 불과하다. 만일 '기관차효과'라는 게 정말 있다면 제일 적절한 대상은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기독교가 생겨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이비종교가 이를 모방해 생겨났는가?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의 관계는 이미 이론으로 정립된 경제학의 '대체재

외 부 기 고

마 사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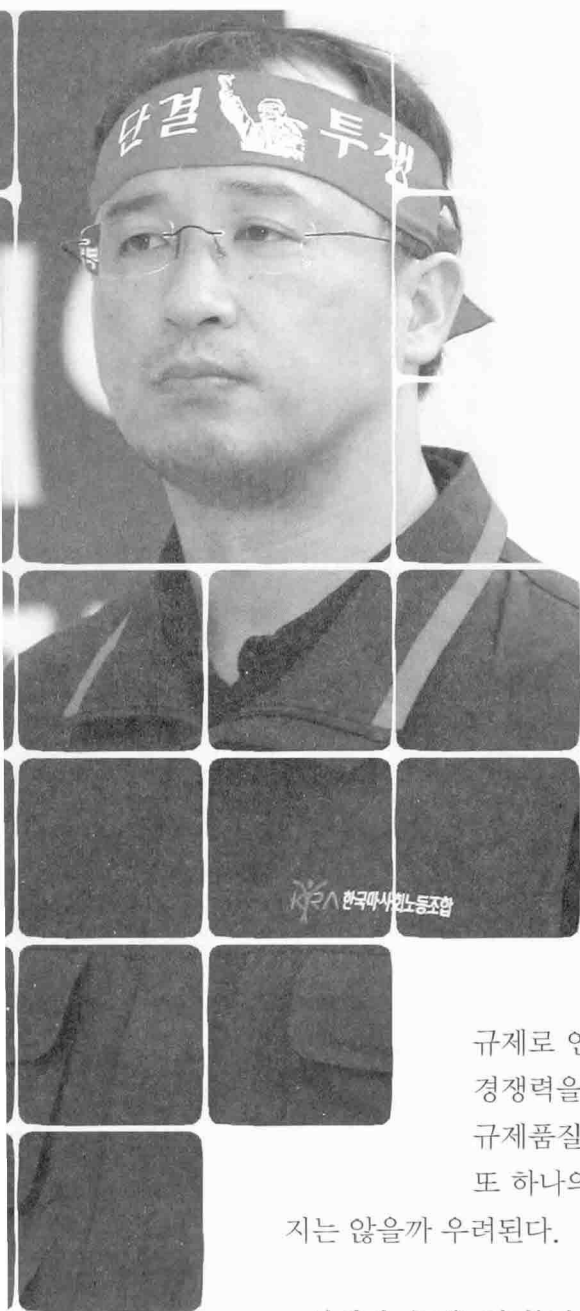
사 감 위 의 진 행 경 과 및

문 제 점

(substitute good)'의 개념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체재란 어느 한 재화·서비스가 다른 재화·서비스와 비슷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어 한 재화의 수요가 늘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줄어든다. 전철이용자가 많아지면 버스승객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여기서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되면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는 '풍선효과'가 설득력을 얻는다. 제도권 사행산업 규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본에서는 같은 사행산업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순전히 수학적 확률에 의존하는 복권, 본인이 직접 승부에 가담하는 게이밍(카지노가 이에 속한다), 타인의 승부에 제3자가 돈을 거는 내기(betting)이다. 경주마가 달리고 승마를 맞추는 경마는 바로 내기에 속한다. 이 중 중독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게이밍으로 보고 있으며, 내기는 레저성이 강한 것으로 여겨 심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

산업유발효과가 가장 크다는 경마는 단순한 내기산업이 아니라 경주마 생산이라는 축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목장에서 망아지가 태어나 경주마로 거듭나고, 이 경주마가 경주에 출주하여 능력을 인정받으면 다시 목장으로 돌아와 씨수말이 되고, 이 씨수말이 다시 망아지를 생산하는 거대한 순환 고리의 일부가 경마다.



리 림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여 정책을 시행하면 경마 뿐 아니라 거대한 말 생산의 순환 고리가 파괴된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리 농어촌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말 산업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말라죽고 마는 것이다.

국내 한 민간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이 연간 78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한 사업체당 규제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이 2천4백만원이나 됐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소는 규제의 품질이다. 우리나라의 규제품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사감위가 만들어진 또 하나의 '저질 규제'가 우리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어쩌면 '돈을 건다'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그 속성이 전혀 다른 사행업종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규제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처음부터 무리였는지 모른다.